
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
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

2026. 6.



교 육 부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진단	2
III. 비전 및 목표	7
IV. 추진과제	8
1. 혁신 선도모델 발굴·육성	8
2. 지역 맞춤형 혁신 기반 구축	14
3. 학교 혁신 확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	16
4. 학교-지역 연계로 상생 발전	18
V. 추진체계	20
VI. 추진일정	21

I. 추진배경

◆ 소규모학교 혁신은 학교 교육력 제고, 지역 균형발전, 국가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

1] 증가하는 소규모학교의 교육·운영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원 필요

- 재정 비효율성, 교육과정 제약 등 소규모학교는 한계점이 명확하나, 개선을 위한 학교 통폐합 중심의 경제적 접근은 실효성이 낮은 상황
 - ※ 소규모학교 : (면·도서벽지) 60명 이하, (읍 지역) 초등 120명 이하 및 중등 180명 이하, (도시) 초등 240명 이하 및 중등 300명 이하 학교
- 특히,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학교 소규모화는 더욱 심각한데,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 필요
 - ※ 전체학교 대비 소규모학교 비율('25년) : (전국) 31.3% vs (인구감소지역) 60.1%

2] 지역학교 육성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전략

- 학교는 가구 단위의 유입 및 정주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학교 발전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
 - 지역 내 '보낼만한 학교'의 부재는 주민들의 이탈로 이어지는 만큼, 지역 학교 육성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
 - ※ '뒤쳐진 교육에 지역 이탈 → 인구 소멸... 악순환 구조 심화' ('25.9. 국민일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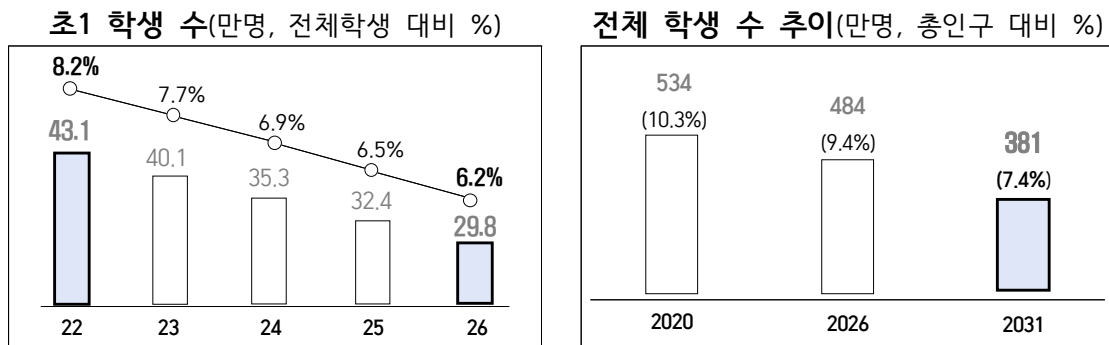
3] 국가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 교육체계 혁신 필요

- AI·디지털 기반 교육, 고교학점제 등 정부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초·중등 교육정책 추진 중
 - 정책 성공의 핵심은 교원 전문성, 프로그램 다양성, 학습 집단 규모 등 충분한 교육 기반 확보에 달려 있으나,
 - 소규모학교 증가와 지역 인프라부족 등 지방은 구조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,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근본적 혁신 필요

II. 현황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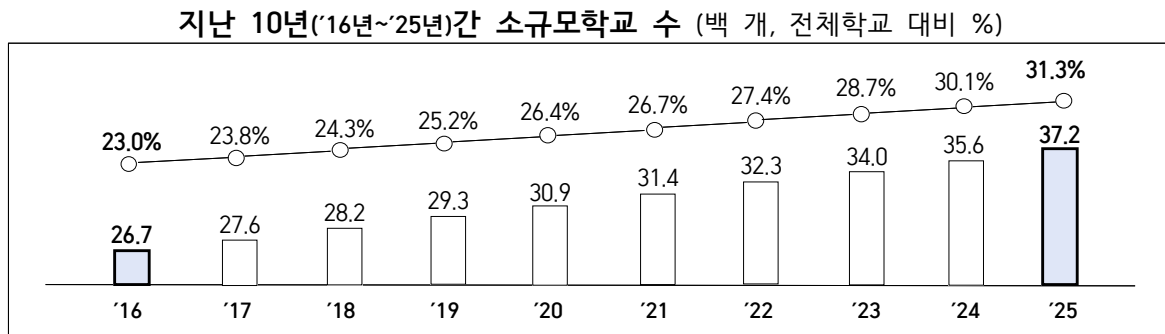
1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학교 증가

- (학생 수 감소) '26년,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수는 30만명이 되지 않으며, 전체 초·중·고 학생 수도 500만명이 되지 않는 상황
 - 학령인구 추계를 고려할 때,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, '31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30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



- (소규모학교 증가)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지난 10년간 약 40%(1,055개교) 증가하여, 현재 전체 학교의 31.3%(3,720개교)에 해당
 -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학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규모학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※ 신입생 0명인 학교 : 58교('21년) → 78교('22년) → 102교('23년) → 132교('24년) → 148교('2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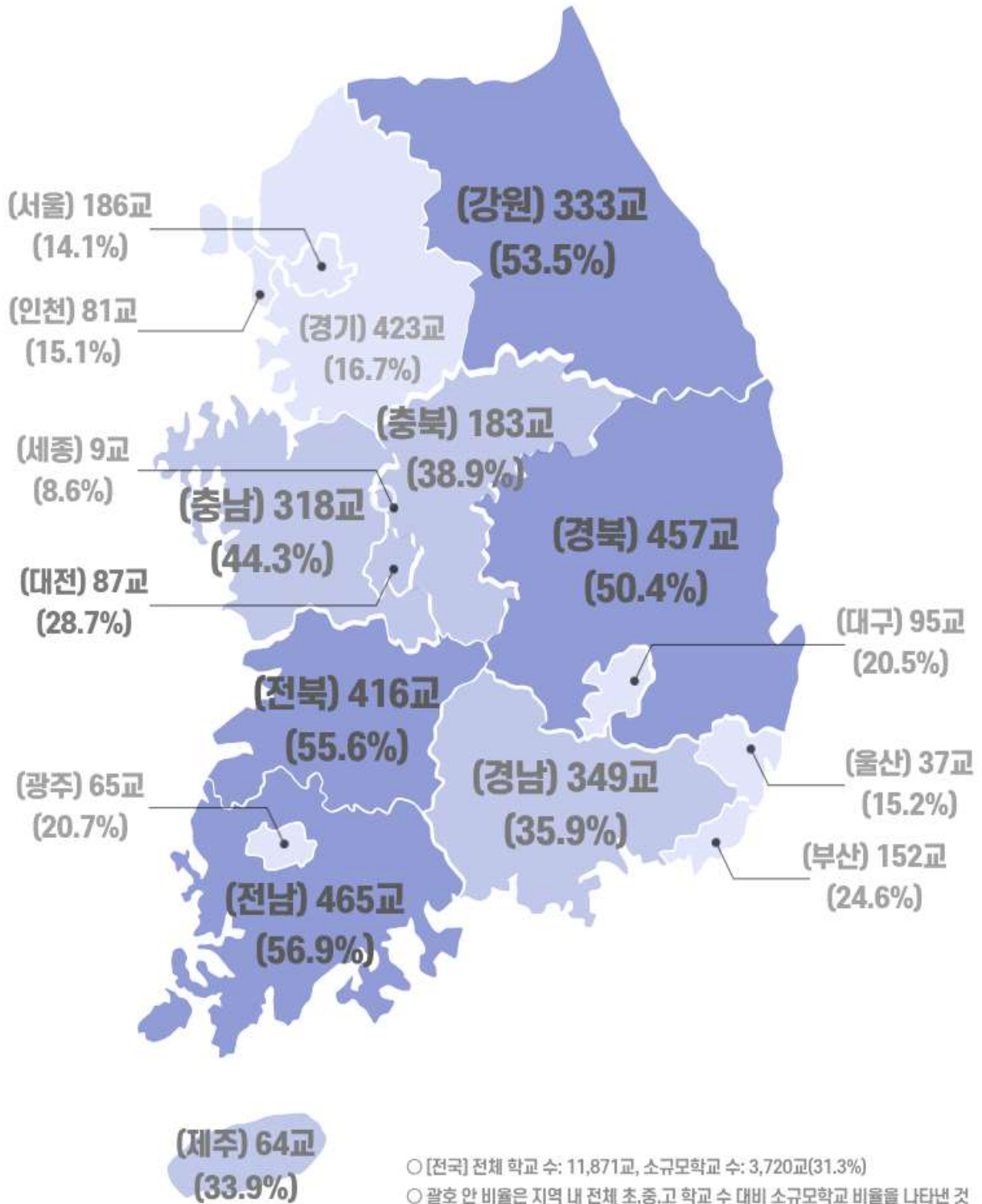


- (지역별 차이)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학생 수는 도시보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, 학교 소규모화도 빠르게 진행 중

※ 지난 10년간 학생 수 감소 비율 : (전국) 14.7% vs (인구감소지역) 27.7%

※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수 : 1,645개교('16년, 47%) → 2,018개교('25년, 60%)

전국 소규모학교 현황



- [전국] 전체 학교 수: 11,871교, 소규모학교 수: 3,720교(31.3%)
- 괄호 안 비율은 지역 내 전체 초,중,고 학교 수 대비 소규모학교 비율을 나타낸 것
- 출처: 2025.4.1. 기준 KEDI 교육통계 / 전국 초, 중, 고(분교장 제외)
- 소규모학교: (면, 도서벽지) 60명 이하, (읍 지역) 초등 120명 이하 및 중등 180명 이하, (도시) 초등 240명 이하 및 중등 300명 이하 학교

2 학교 소규모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·운영상 과제

- **(교육여건 저하)** 대부분의 소규모학교는 교원 확보 및 과목 개설의 한계로 인해 교육과정 다양성이 떨어지고 학생 선택권이 제한
 - ※ 교사 1인당 학생이 적지만, 업무 과중과 순회 수업 등으로 개별 맞춤형 지도가 어려운 상황
- **(재정투입 불평등)** 소규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운영비가 약 2.8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재정적 불평등 초래

< (참고) 공립 소규모학교와 그 외 학교의 평균수치 비교 (지방교육재정알리미, '24년) >

구분	교사	교사 1인당 학생	학교세출액	1인당 운영비*	1인당 운영비 (인건비 포함)
소규모학교	14.9명	5.5명	9.7억원	11.8백만원	30.0백만원
소규모학교 외	46.6명	12.7명	23.3억원	3.9백만원	10.4백만원

* 학교 세출액(교원 인건비 등 제외)을 학교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금액

- **(관계 형성 제약)** 학교 내 학생 수가 적어 또래집단의 규모가 제한되고, 이로 인해 다양한 관계 형성에 제약
 - ※ 소규모학교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관계 형성에 제약이 있어, 소규모학교 특성에 맞는 사회성 발달 지원체계 구축 필요 ('24. KEDI, 소규모학교 사회성 발달 지원방안)
- **(지역 쇠퇴 가속)** 소규모학교라는 약한 교육 기반은 인해 젊은 세대의 유출과 외부 유입 감소를 초래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
 - ※ '급증하는 소규모학교, 방치하면 지방 소멸 가속화' ('24.2. 매일신문)
- **(학생활동·안전 한계)** 방과후 프로그램·동아리 운영 등이 제한적이며 상담·진로 등 개별 맞춤 지원도 제약
 - 일부 소규모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부재로 사고·질병 등 긴급 상황 시 현장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등 학생 안전 확보에 한계

3 그간 소규모학교 혁신이 어려웠던 정책적 요인

① 일회성 재정지원 중심의 단선적인 소규모학교 혁신 지원체계

-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보통교부금 내 '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*'를 편성하여 지원 중

* △학교 통폐합 △분교장 개편 △학교 신설대체 이전 △통합운영학교 개편 시 지원

- 해당 재정지원은 일회성으로 학교 혁신 과정에서의 학교 시설 개선과 물리적 환경 정비에 집중되고 있으며,
- 학교 혁신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부재

🔊 현장의 소리

- ▶ (교육청 담당자) 소규모학교 혁신 이후, 학교 안정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, 현재의 단기 재정지원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.

- 또한, 재정 지원과 함께 소규모학교 혁신 시 중요한 고려 요소들과 연계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적 한계도 존재
- 특히,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·프로그램 운영, 학생 통학 안전 확보, 교원 적정 배치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미흡

🔊 현장의 소리

- ▶ (학부모) 학교를 통합한다고 단순히 학생 수만 늘어나지, 정작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질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오히려 아이들이 더 혼잡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.
- ▶ (학교 담당자)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학교까지 오는 교통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학교에서 근무하실 방과후 강사님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
- ▶ (교원) 학교 통합에는 많은 업무들이 생기는데,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학교 폐지에 따라 교원을 감축해 통합교에는 업무가 과중됩니다.

② 지역 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하향식 정책 추진

- 소규모학교의 교육결손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권고기준과 학교 통폐합 절차 등을 수립·안내하였지만,
 - 통학 여건 등 지역별 현실을 세밀히 담아내지 못한 정량 중심의 지표로 오히려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제약하는 부작용 발생

③ 타 교육정책과 소규모학교 혁신 정책의 유기적 연계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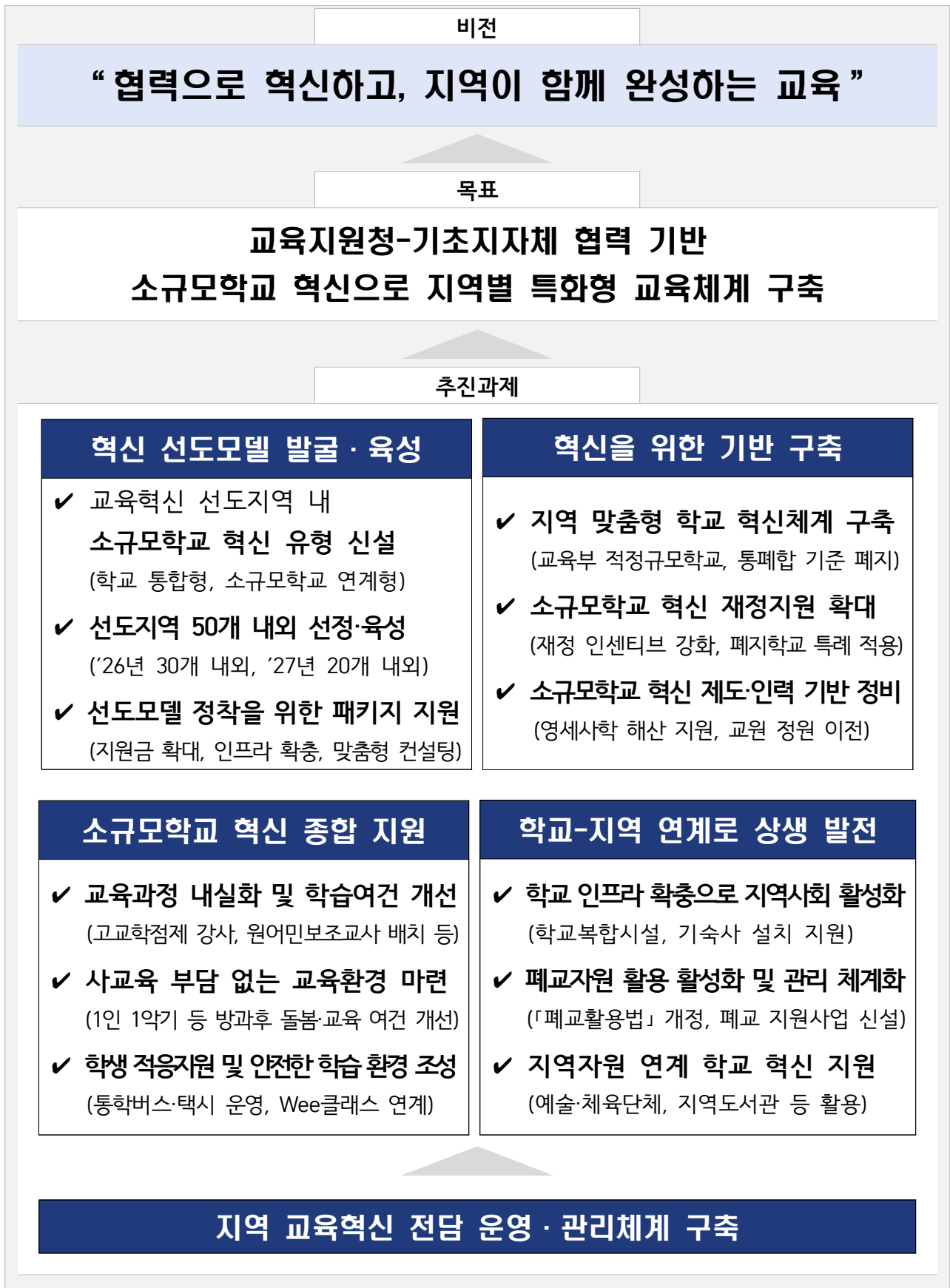
- 교육특구 등 교육청이 특색있게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,
 - ※ 교육특구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재정지원과 다양한 교육적 특례를 제공
(△교육과정 운영 자율 △통합운영학교 운영 △자유로운 전입학 등)
 - 이러한 정책들이 소규모학교 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며, 통폐합 중심의 단편적 추진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 제한

④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소규모학교 혁신

- 그동안의 소규모학교 혁신은 지자체·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없이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
 - 아울러, 통합 이후의 폐교 활용은 학교 통합 인식 제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, 이에 대한 체계적 추진 부족
 - ※ 교육청 보유 폐교재산 및 미활용 폐교재산(25.3.기준) : (전체)1,368개, (미활용)376개

➡ 그간의 정책 한계를 고려하여, 소규모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

Ⅲ. 비전 및 목표



IV. 추진과제

과제 1 소규모학교 혁신 선도모델 발굴·육성

- ▶ 인구감소지역 중심 선도지역 선정, 규제 특례와 행·재정 집중지원
※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사항 안내 ('26.4.)

1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활용해 선도모델 발굴

- 교육혁신 선도지역 내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하는 유형을 신설,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50개 내외 지역 선정*

* '26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'시·군'지역을 30개 내외로 선정 검토

- 교육지원청-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초·중·고 학교급별 혁신모델 (운영계획)을 마련하고 필요한 특례를 신청

< (예시) 학교 혁신과 연계 가능한 교육혁신 선도지역 특례 >

- ▶ (교육과정 특화) 다문화학생, 지역 특화 교육 등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적으로 운영
- ▶ (학생 전·입학)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주소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학교 전·입학 허용
- ▶ (방과후 강화)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, 전문 프로그램 공급 확대

2 선도모델 정착을 위한 패키지 지원

- (재정 지원) 선도지역 지원금(20억원)을 5년간 지원하고, 평가를 통해 우수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추가 예산(10억원) 지원
- (인프라 확충) 선도지역 학교·폐교에는 인프라 관련 사업(학교복합 시설, 기숙사, 폐교활용 등)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

< (예시) 선도지역에 투입 가능한 예산(안) >

재정	학교 통합 인센티브	선도지역 지원금	학교 운영비	총계
	260억원(3개→1개)	20억원+10억원	1~10억원	약 400억원
인프라	기숙사 설치	학교복합시설	폐교활용 지원	
	50억원	40억원	20억원	

- (운영 지원)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, 추후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해 성과공유회 등을 거쳐 타 지역에 확산

※ 별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 위탁 예정

(예시) 학교 혁신모델

1 학교 통합형

□ 개념

-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단위 학교 운영이 곤란한 소규모학교를 학교 통합을 통해 지역 '거점학교'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
※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, 어유초·중, 중·고 등 통합을 통해 통합학교 운영 가능

□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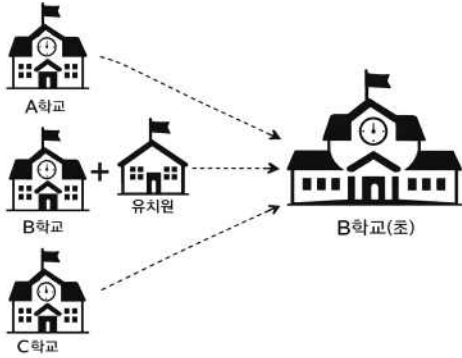
- (학교 개편) 학교 통합을 통해 학생 수와 학급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개편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
- (집중 지원) 통합학교에 재정·인적 자원을 집중지원하여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'거점학교'로 육성
※ 통합 인센티브, 학교 운영비 등을 활용해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
- (폐교 활용) 통폐합 이후 발생하는 폐교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개발하여 지역자원으로 활용

□ 실행 체계 ※ 아래 실행 체계를 여건에 맞게 조합·변형하여 운영

- (대상학교 선정) 학생 수 추이, 교육과정 운영 여건, 통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 대상 학교 선정
※ 지역 인구구조와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해, 어린이집·유치원 설치 필요성 파악
- (주민 의견수렴) 교육(지원)청과 지자체가 통합 대상학교가 포함된 지역 교육혁신 방안*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·학부모에게 설명
* △학생 통학 지원 △폐교 부지 활용 △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
- (학생 지원) 통학버스, 기숙사 운영 등 통학·생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, 통합 이후 학교 이동에 따른 학생 적응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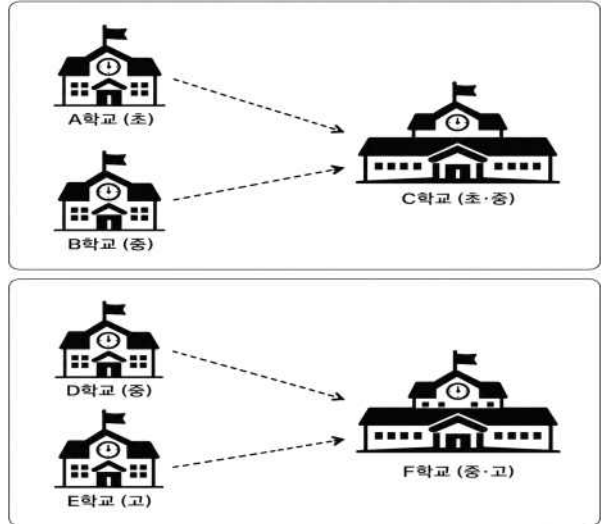
□ 운영 방식(안)

① (기본) 동일 학교급간 통합형



- (개념) 하나의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학교를 통합
 - ※ 학교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가능
- (사례) 전북 부안군 하서초

② (기본) 타 학교급간 통합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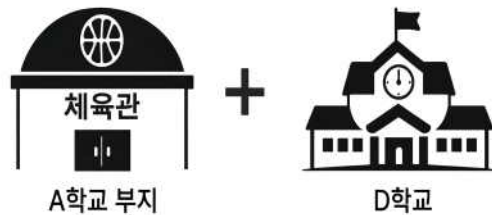
- (개념) 학교급이 상이한 학교간 통합을 통해 거점학교를 신설
- (사례) 대구 호산중·고등학교

③ (확장) 어린이집·유치원 혼합형



- (개념) 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설치
 - ※ 상담·돌봄 분야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해 어-유-초 공동 활용
- (사례) 부산 영도초 / 전북 부안군 변산초

④ (확장) 폐교부지 활용형



- (개념) 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폐교 부지에 학생·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설치
- (사례) 강원 근덕초노곡분교장 웹툰센터

2

소규모학교 연계형

□ 개념

- 인접한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교육권역으로 묶어 학교는 유지*하되, '중심학교'를 기준으로 인적·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
- * 일부 학교는 분교장(캠퍼스)형태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

□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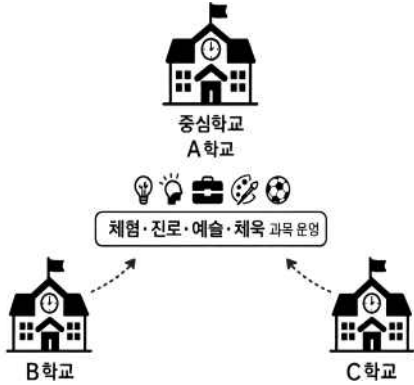
- **(교육과정 공동 운영)**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공동 개설하되, 체험·진로, 예술·체육 중점 교육과정 공동 운영
- ※ (예시) 학사 일정 일부를 통합 운영하고 공동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 전담교사 배치
- **(비교과 활동 연계)** 학생 자치 활동 및 동아리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, 체험학습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공동 실시
- **(수업방식 다각화)** 학교 간 이동수업을 통해 대면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원격방식 활용

□ 실행 체계 ※ 아래 실행 체계를 여건에 맞게 조합·변형하여 운영

- **(권역 설정)** 지리적 접근성과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2~5개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연계권역으로 설정
- **(중심학교 지정)** 권역 내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인적·물적 자원 운영을 총괄하는 '중심학교'를 지정
- * △공동 교육과정 기획 △연계 운영 관련 예산 집행관리 △공동 동아리·체험학습 주관 등
- ※ 추후, 중심학교를 기준으로 주변 소규모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
- **(학년 분리)** 저학년(1~4학년)은 기존 학교에서, 또래관계 형성이 중요한 고학년(5~6학년)은 한 학교로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
- **(협력체계 구성)** 교육과정 편성, 통학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장-교육지원청-기초지자체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성

□ 운영 방식[안]

① (기본) 소규모학교 캠퍼스형



- **(개념)** 중심학교에 인근 소규모학교의 수요가 있는 과목 공동 개설
※ 인근 소규모학교는 분교장(캠퍼스) 형태로 개편
- **(사례)** 제주 제주중앙여고 (AI 거점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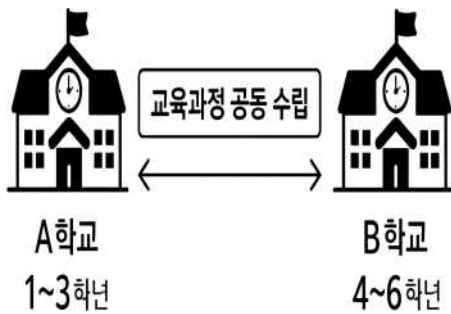
①-1 (선행) 학교별 특성화형

※ 기본 유형 실시 전 적용 모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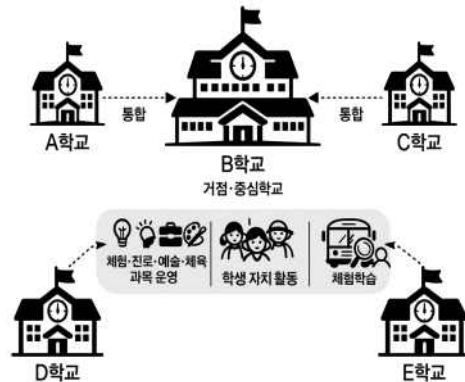
- **(개념)** 학교 간 특성화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
※ 방과후 과정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
- **(사례)** 경남 남해군 고현초·도마초 공동 교육과정 운영

② (기본) 학년 분리형



- **(개념)** 인근 소규모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 수립하고, 학년을 나누어 배치해 학년당 일정 규모의 학생 수 유지
※ 1~4학년(저학년)은 각 학교에서 5~6학년(고학년)은 한 학교에 모여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
- **(사례)** 제주 무릉초-대정서초

③ (결합) 통합형+연계형 결합



- **(개념)** 학교 통합을 통해 신설한 B학교(거점학교)를 중심으로 인근의 소규모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·학생자치활동 등을 연계해 운영
※ 인근 소규모학교는 분교장(캠퍼스) 형태로 개편

◆ 각 유형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

예시) ②+③ : 학년분리형으로 운영하면서 학생 자치활동을 함께 하고, 교원도 공유

거점학교 운영 예시

(B·C학교를 A학교로 통합)



외국어 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(정규·방과후 모두) 대학 연계 외국어 특강 의사소통 중심 학습 	맞춤형 자율 교육과정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질문하는 학교로 개편 수준별 맞춤형 교과수업 자율형 학교로 운영 (자공고 등)
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질높은 체험교육 지원 (수학여행, 체험학습) 1인 1악기, 스포츠클럽 활성화 	방과후 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교육없는 학교 조성 (수준별 교과수업 실시 등) 지역 예술·체육단체 연계

체육관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복합시설 지역주민 공동 활용 	우수교원 유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센티브 제공 역량 강화 연수 	기숙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거리학생 거주 안전한 학습 환경 	통학버스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·C학생 등하교 방과후에도 운영
--	--	---	--

B학교 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팜 조성 학교복합시설 사업 학생 → 환경교육 / 주민 → 농업교육 전문강사 활용(농진청 연계)
--

C학교 부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I 교육 지원센터 폐교활용 지원사업(행안부 협업)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인근학교 시설 공동활용

과제 2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

▶ 체계 구축, 행·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

◆ 과제 2~4는 선도지역에 한정하지 않고, 모든 지역의 학교 혁신 지원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진·적용

1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혁신 체계 구축

- (규제 전면 폐지) 교육부에서 수립·안내한 학교 규모 척도인 '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('15년)' 폐지
 - ※ 개편기준과 더불어, 학교 통폐합 의결기준(학부모 과반수 이상 동의)도 함께 폐지
- 교육부는 행·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(지원)청의 학교 혁신계획 이행을 지원하고, 전문기관을 활용해 관련 컨설팅 실시
- (자체기준 마련)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
 - ※ (예시) 서울 : (초등) 240명 이하 / (중등) 300명 이하
경남 : (면지역) 20명 이하 / (읍지역) 30명 이하 / (도시지역) 60명 이하
- 기준·절차 수립에 앞서 기준·절차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, 지원청별 학교 통합·혁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

< (참고) 학교 혁신 관련 업무체계 변화도 >

	현재 (Top-down)	향후 (Bottom-up)
교육부	▶ 적정규모학교 기준 및 학교 통합 절차·기준 제시	▶ 교육청 요청 시, 전문기관을 활용해 수립한 기준·절차 등에 대해 컨설팅
	↓	↑
교육청	▶ 중앙 기준을 토대로 자체기준 수립 및 통합 대상학교 선정을 포함한 학교 통합계획 수립	▶ 지원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하여 교육청단위 학교 통합 절차·기준 등 마련
	↓	↑
지원청	▶ 학교 통합계획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교 통합 추진	▶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소규모학교 혁신 계획 마련 및 기준·절차 제시

②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혁신 활성화

- (인센티브 강화) 학교 통합, 분교장 개편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 인센티브를 약 50% 이상 대폭 확대
- 학생 적응 지원 등 사전 지원을 위해 통합 계획 확정 시 일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

< 통합 인센티브 지원금 개선(안) (단위 : 억원) >

구 분	현 행*(AS-IS)	향 후(TO-BE)
본교를 폐지	(초등) 40 - 60 (중등) 90 - 110	(초등) 75 (중등) 130
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	5	10
분교장인 학교를 폐지	20 - 40	40

- (특례 적용)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학교 수 산정 시, 폐지된 학교 수에 가산율(학교 수 x 1.5)을 적용
- ※ 현재,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학교 수 산정 시 ①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일부 제외) ②최근 5년간 폐지된 학교 수 ③온라인학교 수를 더해 산정

③ 소규모학교 혁신 제도·인력 기반 정비

- (사립 소규모학교) 소규모 영세사학이 원만히 해산할 수 있도록 「사립학교법」 개정*을 통해 사학법인 해산정리금 등을 지급
- * (예시) ①잔여재산 처분 방법 : 공익법인 출연, 사회복지법인 출연, 지자체 귀속 ②해산정리금 한도액 : 지자체로 귀속되는 잔여재산 귀속분의 15% ⇒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예정
- (교원 정원 이전) 학교 통합 이후 폐지된 학교 정원 일부를 통합학교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통합 이후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
- ※ (예시) 폐교된 학교의 교원 정원 수요 중 50% 내외를 반영(단, 3~5년차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통합학교로 이전한 교원 정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)
- (우수교원 유치) 농어촌지역 거점·중심학교에 우수교원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근무에 대한 인사 우대 특례 도입
- ※ 시도별 여건에 따라 전보 유예, 우선 전보, 전보가산점 등 세부사항 결정하고, 시도별 필요에 따라 승진가산점 부여

과제 3 소규모학교 혁신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

- ▶ 교육과정 운영, 방과후, 학생 심리·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실시

1] 교육과정 속 다양한 배움 활동 지원

- **(교육여건 개선)**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에 대응해 거점·중심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료 지원
 - 농어촌·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대학·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·거점학교 학생의 진로체험 기회제공 확대
- **(AI 교육)** 학교 통합으로 폐교된 학교를 AI 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롭고 확장된 AI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※ 교육부-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별교부금·교부세 폐교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
 - 체험활동, 공동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AI교육 격차 해소 지원
- **(외국어학습 여건)** EPIK 사업*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거점·중심학교에 중점 배치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학습 환경 조성
 - *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·지원 사업
 - ※ 선도지역 내 통합학교에는 1명 이상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
 - 주변 소규모학교에서도 해당 원어민 교사를 통한 실생활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 편성

2] 방과후의 돌봄·교육 여건 대폭 개선

- **(프로그램)**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에서 보다 양질의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대학, 전문 기관 연계 프로그램 공급 확대
 - ※ 소외지역 대상 프로그램 공급(창의재단), 교육청지자체별대학 등 연계 프로그램 공급 등 사업 활용

- **(돌봄) 통합·거점학교에 질 높은 돌봄·교육 시설 구축, 지역사회 연계 돌봄·교육 운영 모델*** 마련 등 집중 지원

* (예시) 지역의 돌봄기관을 학교 내로 이전하여 학생·학부모의 이동 부담 완화(복지부 등 협조), 방학 중 돌봄·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·서비스(도시락 등) 제공

- 수요가 있는 지역에, 통합·거점학교와 폐교에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돌봄·교육을 제공하는 '온동네 돌봄·교육센터' 구축 지원

③ 학생 적응지원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

- **(정서·심리) 통합학교에는 Wee클래스를 운영하여 학교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·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고 학교 적응 지원**

- 학교 이동 전 단계에서는 지역 Wee센터와 협력하여, 학생·학부모 대상 심리·정서 상담을 제공해 학교 이동에 따른 불안을 사전에 완화

※ (예시) 지역 Wee센터에서 통합 예정교 학생 대상 심리 지원프로그램 개설

- **(통학 지원) 모든 학생의 통학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매칭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**

※ 「교육환경법 시행규칙」 상 학생 통학범위는 30분 이내로 규정

- 학생 통학 외 시간에는 통학버스를 어르신 등 지역주민 이동 지원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

※ 교육청·지자체 수요를 받아 특별교부금·교부세 매칭을 통해 시범 운영 추진('28년)

※ 버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학생 대상 '통학택시'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

- **(학생 안전) 통합·거점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법정 정원 충원을 위해 지속 노력**

※ 「학교보건법」상 36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둠

- 학교 주변 안전 사각지대 **최소화**를 위해 행정안전부·지자체와 함께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등하굣길 안전 강화

과제 4 학교-지역 연계로 상생 발전

- ▶ 거점학교 인프라 확충, 폐교자원 활용·관리 체계화, 지역사회 연계

1 학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

- **(학교복합시설)**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체육·문화시설을 학교 복합시설사업을 통해 통합·거점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
 - 특히, 인구감소(관심)지역 및 농산어촌지역의 사업은 총사업비의 80% 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하고, 학교(폐교 포함) 리모델링도 지원대상으로 포함

< 학교복합시설사업 개선사항 >

구 분	2025년	2026년
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비율	사업규모에 상관없이 50% 지원	(150억원~) 50% (100~150억원) 70% (~100억원) 80%
지원대상	학교 시설 신·증축	학교 시설 신·증축 + 학교 리모델링

- **(기숙사 설립)**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기숙사 설립 수요가 있는 경우, 보통교부금 등*을 활용해 설치 지원

* 예시)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내 '학교 통합에 따른 기숙사 설치'를 신설

2 폐교자원 활용 활성화 및 관리 체계화

- **(활용 제고)** 「폐교활용법」 개정을 통해 폐교 무상대부 특례를 확대*하고, 활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**하여 규제 개선

* (기존) 교육·사회복지·체육·문화·소득증대·농어시설 → (개선) 기존 + 통합돌봄·공공시설

** (예시) 혐오·위험 시설 등을 제외하고 폐교 활용을 허용




- 특별교부금(교육부)과 특별교부세(행안부)를 매칭하여 시설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폐교 활용 지원사업 신설 (연간 120억 규모)

- **(관리체계 확립)** 현재 교육청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,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 - 아울러, 폐교시설정보시스템 내 폐지 학교의 역사·사진 등을 등록·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하여 학교 역사 보존 및 지역 주민 공유 기반 마련

③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소규모학교 혁신 지원

- **(프로그램)** 지자체·지역 공공기관의 교육·돌봄·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에서 특색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 - ※ 교육(지원)청에서 지자체·지역공공기관과 MOU 등을 체결해 프로그램 공급 추진
- **(시설)**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도서관, 체육시설 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발굴·연계해 방과후 등 교육활동에 활용
- **(인력)**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통학 도우미로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
 - 지역예술·체육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·학부모 수요가 높은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

< (참고)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례 >

<p>프로그램 (전북)</p>	<p>• 농촌진흥청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'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'을 운영</p>	
<p>시설 (경북 영덕)</p>	<p>• 영덕군에서는 우수 지역 중·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미래인재양성관'을 운영</p>	
<p>인력 (경남 창녕)</p>	<p>• 창녕군은 복지부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'시니어 워킹스쿨버스'를 운영</p>	

V.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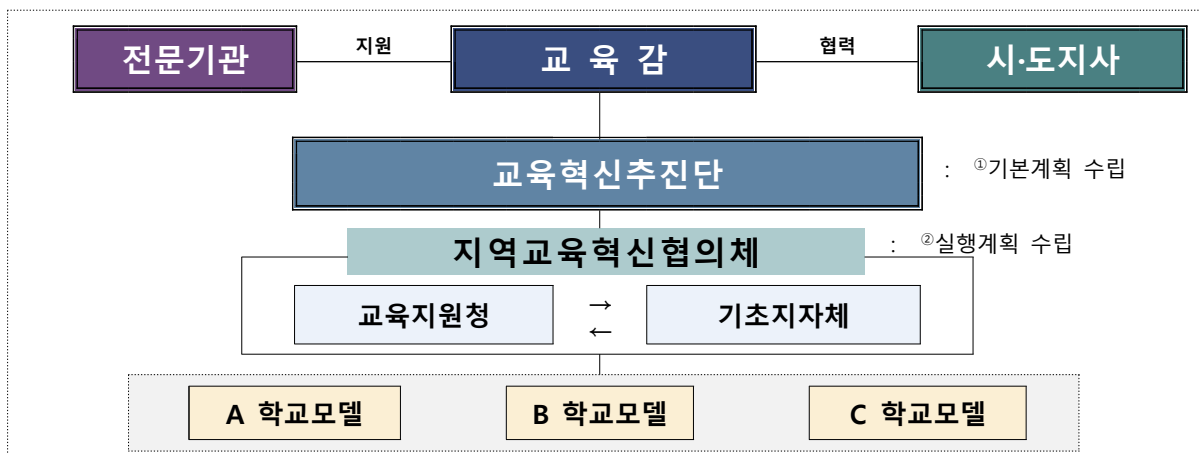
1. 전담 운영·관리체계 구축

- (전담조직 운영) 교육청별로 '교육혁신추진단'을 설치하여 소규모 학교 혁신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
 - ※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되 학생 배치, 돌봄, 교육과정, 영·유아 등 전 부서 참여
- 지역 학교 혁신모델을 담은 소규모학교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초 단위 학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·재정지원 및 성과 관리
- (협력체계 구축)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인 '지역교육혁신협의체' 구성·운영
 - 협의체를 통해 소규모학교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 공공 자원을 활용한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소통·협력 실시

2. 전문 지원기관 운영

- 소규모학교 혁신을 전문적·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·시설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·운영
 - △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개선 관련 맞춤형 컨설팅 △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△우수사례 발굴·확산 △성과 분석·환류 등 수행

< 지역별 소규모학교 혁신 운영체계(안) >



VI. 추진일정

정책 과제	소관기관/부서	추진 일정
1. 혁신 선도사례 발굴·확산		
• 교육혁신 선도지역 내 유형 신설·공모	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	'26.2분기
• 선도모델 정착·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전문기관 운영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'27.~
2. 지역 맞춤형 혁신 추진 기반 구축		
• 교육청별 적정학교 기준 및 통합 절차 마련	시도교육청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'26.3분기
• 통합 인센티브 확대 및 관련 지침 개정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'26.3분기
• 폐지 학교 정원을 통합학교에 이전	교육부 교원정책과	'26.4분기
• 사학 해산 지원을 위한 「사립학교법」 개정 발의	교육부 학교정책과	'26.4분기
3. 학교 혁신 확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		
• 고교학점제 관련 강사료 지원	교육부 고교학점제지원과	연중
• 폐교에 AI 교육지원센터 설치·운영	교육부 인공지능교육진흥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'26.3분기
• EPIK 사업을 활용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	국립국제교육원	'26.2분기
•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공급 전문기관 확대	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	'26.2분기
• 온동네 돌봄·교육센터 확충	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	'26.4분기
• 통합·거점학교 Wee 클래스 운영 및 Wee 센터 협력	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	연중
• 지역대학·기업 연계 진로 체험프로그램 확대	교육부 공교육진흥과	연중
4. 학교-지역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		
• 거점·중심학교 및 폐교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선정	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	'26.2분기
• 소규모학교 혁신 관련 기숙사 설치 지원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연중
• 폐교재산 관리체계 일원화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	'27.~
• 폐교시설정보시스템 개편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'27.~
•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교 혁신 지원	시도교육청	연중

지역별 학교 수 및 소규모학교 현황

(단위: 교)

시도	초		중		고		합계	
	전체	소규모	전체	소규모	전체	소규모	전체	소규모
서울	609	85 (14.0%)	390	75 (19.2%)	318	26 (8.2%)	1,317	186 (14.1%)
부산	304	92 (30.3%)	171	48 (28.1%)	142	12 (8.5%)	617	152 (24.6%)
대구	240	58 (24.2%)	127	32 (25.2%)	96	5 (5.2%)	463	95 (20.5%)
인천	265	42 (15.8%)	145	27 (18.6%)	128	12 (9.4%)	538	81 (15.1%)
광주	155	38 (24.5%)	91	18 (19.8%)	68	9 (13.2%)	314	65 (20.7%)
대전	151	44 29.1%	90	37 41.1%	62	6 9.7%	303	87 28.7%
울산	122	26 (21.3%)	64	8 (12.5%)	57	3 (5.3%)	243	37 (15.2%)
세종	55	6 (10.9%)	28	1 (3.6%)	22	2 (9.1%)	105	9 (8.6%)
경기	1,353	288 (21.3%)	680	115 (16.9%)	495	20 (4.0%)	2,528	423 (16.7%)
강원	347	229 (66.0%)	160	75 (46.9%)	116	29 (25.0%)	623	333 (53.5%)
충북	256	133 (52.0%)	131	43 (32.8%)	83	7 (8.4%)	470	183 (38.9%)
충남	413	224 (54.2%)	187	71 (38.0%)	118	23 (19.5%)	718	318 (44.3%)
전북	407	268 (65.8%)	208	107 (51.4%)	133	41 (30.8%)	748	416 (55.6%)
전남	424	284 (67.0%)	250	143 (57.2%)	143	38 (26.6%)	817	465 (56.9%)
경북	467	280 (60.0%)	257	131 (51.0%)	183	46 (25.1%)	907	457 (50.4%)
경남	510	232 (45.5%)	268	96 (35.8%)	193	21 (10.9%)	971	349 (35.9%)
제주	114	52 (45.6%)	45	11 (24.4%)	30	1 (3.3%)	189	64 (33.9%)
전체	6,192	2,381 (38.5%)	3,292	1,038 (31.5%)	2,387	301 (12.6%)	11,871	3,720 (31.3%)

※ 출처: KEDI 교육기본통계(2025.4.1. 기준 / 전국 초·중·고(분교장 제외))

※ 소규모학교 : (면·도서벽지) 60명 이하, (읍 지역) 초등 120명 이하 및 중등 180명 이하, (도시) 초등 240명 이하 및 중등 300명 이하 학교

※ 출처: KEDI 교육기본통계(2025.4.1. 기준 / 전국 초·중·고(분교장 제외))